

“석탄발전 2040년 완전 폐지… 원전·재생에너지 적절 활용”

기후부 출범 1주년 간담회

김성환 장관 “기후위기 해결 위해 에너지 대전환·순환형 경제 핵심”

2035 NDC 맞춘 전력수급 계획 수립 수송·난방·산업 전반 전기화 속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부처 출범 1주년을 맞아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히 폐지하고, 원자력발전과 재생 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송·건물·산업 등 사회 전반의 전기화를 확대하는 동시에, 출범 첫째 성과가 미흡했던 녹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 체계는 대폭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석탄 발전은 2040년까지 마무리하고 원전은 적절히 잘 섞고, 재생에너지 100GW”를 추진하겠다고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존 환경부의 기후·환경 정책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기후부는 규제와 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

흥의 조화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기후위기 문제를 풀기 위해 에너지 대전환과 순환경제를 순환형 경제로 바꾸는 일이 핵심 과제”라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가치로 보면 기존 환경과 기존 에너지는 분리되거나 대치되는 과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현재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NDC 목표를 세웠고 12차 전기본을 통해 상응하는 전력수급 계획을 세우는 와

중”이라며 “기존 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목표로 전력망 접속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전력망 수용량을 넘어서는 발전설비도 우선 접속을 허용하되 전력 과공급 시 일시적으로 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을 도입해 호남권 태양광 수용량을 2.6GW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10GW 규모의 하수·지연 사업 접속권을 정비하고, 배전망 비용 투자 주체를 한국 전력공사로 전환해 전력망 수용량을 송전

기준 최대 171GW, 배전 기준 110GW까지 대폭 늘릴 전망이다.

에너지 전환과 함께 수송·난방·산업 전반의 전기화도 속도를 낸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하고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23.2%에 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버스·트럭·농기계·건설기계·선박까지 전기화를 확대한다.

김 장관은 “캐즘이 있었지만 신차 전기차 비중이 24%로 높아졌다”며 “내년은 3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버스 국산화 비중도 높아지고, 트럭과 특수차량도 하고 있다”며 “농기계, 건설기계, 배도 하고 있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서 생소했던 난방 전기화도 히트펌프를 올해 초 보급했는데 심리적으로는 대세화되고 있다고 본다”며 내년에는 가스 배관이 없는 아파트 건설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대배출 5대 업종의 구조를 재편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후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해 10억 4000만 톤의 홍수 조절용량

을 추가 확보하고 러브버그 대응 및 순환 경제 전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으나, 녹조 대응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했다.

김 장관은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미흡한 것도 많다”며 “특히 녹조 계절관리제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모로 준비가 미흡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강에 유입되는 것을 줄이고 물의 유통도 높여서 국민들이 ‘녹조도 해결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구·부산 물 대책도 약간 진전이 있다”며 “대구는 낙동강 복류수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출범 1년을 되돌아보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점을 과제로 짚었다. 그는 “에너지 대전환이 문명의 대전환과 같으니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다 수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부족한 것은 이후에 전문가, 시민사회와 최대한 소통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문제를 책임지는 기후부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단일불포화지방산 함량 높은 토종닭 달걀”

농진청, 토종닭 활용 범위 확대 프리미엄 달걀 생산·유통 체계 구축

토종닭을 고기에 더해 달걀 생산에 쓰기 위한 농가 보급체계가 구축된다. 씨닭 공급과, 사육, 품질관리, 유통까지 아우르는 토종닭 달걀이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농진청은 1일 자체 개발한 산란용 토종닭을 활용해 프리미엄 달걀의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조용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달걀을 고를 때 가격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와 친환경 등 생산 방식과 품질을 살피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토종닭의 특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달걀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내 토종닭 산업은 백숙과 삼계탕 등 고기용 중심이었다. 이에 여름철만 소비가 집중되는 한계를 보였다. 축산과학원은 토종닭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여러 계통을 단계적으로 교배하고 산란 능력을



(왼쪽부터)산란용 토종닭과 일반란의 난각색 비교.



/농진청

검정해 달걀 생산에 적합한 교배체계를 확립했다.

조 원장은 “통상 산란 농장에서 입식하는 닭의 경우 20주령부터 정상적인 알을 낳기 시작한다”며 “육용계를 산란용으로 개발했음에도 약 21주령에 산란을 시작해 일반적인 산란 능력이 우수한 산란계에 뒤지지 않는 성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반 산란계가 연간 약 250~300개의 달걀을 낳는 데 반해, 기존 육계용 토종닭은 150개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개량을 통해 산란 능력을 일반 산란계의 8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달걀 성분에서는 일반 달걀보다 노른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단일불포화지방산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란용 토종닭 달걀의 평균 난황 무게는 16.27g으로 조사됐다.

맛 측면에서도 일반 달걀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조 원장은 “감칠맛을 좌우하는 아스파르트산이나 글루타민산 등의 함량이 일반 산란계보다 높다”며 “풍미와 고소한 맛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달걀 껍데기도 일반 산란계의 진한 갈색이나 흰색과 달리 밝은 색을 띠고 개체별로 미묘한 색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농진청은 연구 성과를 실제 농가 생산으로 연결하기 위해 씨닭 공급부터 사육·품질관리·유통까지 이어지는 보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ESG 경영 강화

한국ESG 학회와 ‘맞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 부문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 지표 개발에 나선다.

공단은 1일 한국ESG학회와 ‘산업안전보건 분야 상생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사회’영역 내 산업안전보건의 가치를 표준화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ESG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협업한다.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 특화 ESG 평가 지표 및 가이드 개발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 및 인프라 공유 ▲산재예방 및 ESG 경영 정착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간다.

공단은 그간 쌓아온 산재 예방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학회는 이를 토대로 개발한 산업안전보건 특화 ESG 평가 지표 및 가이드 개발 연구 성과를 공단과 공유한다. 이를 통해 평가를 표준화하고 정밀도를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또 학술대회와 안전문화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자체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현중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 중심의 ESG 경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공단의 전문 데이터와 학회의 다학제적 연구 역량을 결합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든든한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문현 한국ESG학회 고문현 회장은 “대한민국 ESG경영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모범적인 협력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자원공사, 기후테크 기업 지원 공로 인정

‘조달의 날’ 기념식서 대통령 표창 혁신제품 초기 판로·해외 수출 뒷받침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국내 물·기후테크 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과 수출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최고 포상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9월 30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에서 혁신제품 공공조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물·기후테크 분야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국내 물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기술 성능을 검증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로 뒷받침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공사는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단순 국내 활용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실증 및 글로벌 시장 진출로 지원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시범구매사업에서 수자원공사는 기업별 맞춤형 해외 실증 대상지와 현지 협력 기관을 발굴하고 국내 혁신 기술을 현지 수요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사업 참여 첫해인 올해 1·2차 사업을 통해 총 10개 물기업이 11개국 15개 실증지에서 약 27억 원 규모의 해외 실증과제를 추진하는 결실을 거뒀다.

/세종=한용수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거제 수해지 등 현장 방문

안정적 전력공급·재난 대응 등 미래 에너지 신산업 현장경영 강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거제 수해 복구 현장을 비롯해 백령도 등 도서지역과 신안 해상풍력 단지를 잇달아 방문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재난 대응, 미래 에너지 신사업을 챙기는 전방위 현장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김동철 사장은 지난 9월 28일 경남 거제시의 극한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전력설비 복구 현황과 임시전력 공급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거제

지역은 지난 8월 기록적인 호우로 전주·변압기 등 203건의 설비 피해와 2504호의 정전이 발생했던 곳이다. 한전은 당시 긴급 복구 인력을 투입해 정전 가구의 97%를 하루 만에 정상화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이날 인근 도서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월 배전철탑의 자연재해 취약요인을 살피고, 거제지사 직원들과 만나 복구 과정에서의 작업 안전 개선 의견과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사장은 앞서 여수, 백령도, 신안 등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별 전력 공급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백령도 등 도서지역에서는 설비 유지보수 현황과 주민 애로사항을 확인했으며, 신안 해상풍력 단지에서는 공기업으로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당부했다.

현재 한전은 어려운 재무 여건 속에서도 연간 호당 정전시간 9분대, 송배전 손실률 3.5%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태풍·폭염 등 기상 악화 속에서도 연인원 23만 여 명의 전력인이 24시간 전력망을 지켜온 결과라는 평가다.

김동철 사장은 “재난지역과 도서·오지 지역 국민도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전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